

과태료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70
----------	------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금액을 부과하는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규정에 대해 일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안 제1조)

-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6

나. 질서위반행위 상의 절차 위반한 경우(안 제2조 ~ 제6조)

-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 제6조

-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3조

-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4조

-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제51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9. 4. 19. ~ 2019. 5. 9.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덧붙임

10. 관련부서 : 경기도 법무담당관

과태료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과태료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관하여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를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 한다.”를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남시 재무 회계 규칙」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을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하남시 재무회 계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5조(「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폐지)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 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6조(「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 제목 “(지방세 징수의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을 우선 적용하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혁신기획관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혁신기획관 이명훈
	팀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홍은혜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윤라 (790-5520)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 <u>행정절차법</u> 」을 준용한다.	제5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 <u>질서위반행위규제법</u> 」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 ① (생략) ②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은 <u>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u>	제6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은 「 <u>질서위반행위규제법</u> 」을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조(「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3조(준용규정) ----- ----- 관한 사항은 「 <u>질서위반행위규제법</u> 」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의 예에 따른다.

제4조(「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u>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 한다.</u> ② (생략)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 ----- ----- ----- -----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u>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u>	제14조(준용규정) ----- <u>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u> ”

제5조(「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6조(「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51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u>이 조례에 정한 것</u>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1조(준용)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u>을 우선 적용하고,</u> ----- -----.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 3. (생략)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1. ~ 3. (현행과 같음) 10만원 이상 <u>30만원 미만</u> 30만원 이상 <u>50만원 미만</u>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2018. 5.



지방자치분권실
자 치 법 규 과

I. 추진배경

1. 과태료

- (과태료)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해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임
 -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이 법에 따라서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정비배경

- 과태료는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규정·집행할 수 있는데,
 - ① 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금액을 부과하는 규정,
 -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규제법”) 등에 저촉되는 규정을 자치법규에 두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규정은 법체계상 혼란을 주거나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바,
 -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Ⅱ. 상위법을 위반한 자치법규 유형

1 과태료 금액을 잘못 규정하거나 과도하게 규정

1. 자치법규 현황

- 자치법규의 완결성 등을 이유로 자치법규에서 별표 등으로 과태료 금액을 자세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음

< OO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

제14조(과태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한 자치법규의 경우 법령 위임 없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하거나 위임 범위에 맞지 않게 규정한 경우가 많고,
 - 이 과정에서 상위법상의 기준이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금액을 규정한 경우가 있음(383건)

2. 문제점

- 법령에서 금액에 관한 위임 없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경우 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임
 - 상위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령상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임
- ⇒ 위법한 과태료 금액 관련 자치법규로 인해 과태료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고,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할 수 있음

3. 위법한 자치법규 사례

<사례 1.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그 종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법령과 다른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u>20</u>	<u>20</u>	<u>20</u>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u>20</u>	<u>20</u>	<u>20</u>

< OO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5 >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 물을 버린 자(법 제8조제1항)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1kg 미만	<u>100</u>	<u>150</u>	<u>200</u>
(2) 1kg 이상 10kg 미만	<u>130</u>	<u>180</u>	<u>200</u>
(3) 10kg 이상	<u>150</u>	<u>200</u>	<u>200</u>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 10kg 미만	<u>100</u>	<u>100</u>	<u>100</u>
(2) 10kg 이상 20kg 미만	<u>150</u>	<u>150</u>	<u>150</u>
(3) 20kg 이상	<u>200</u>	<u>200</u>	<u>200</u>

<사례 2. 상위법령의 사유별 금액보다 과다 규정한 경우>

-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세분하여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기준을 배제하고 최대 75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u>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u>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u>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u>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u>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u>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u>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u>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OO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

- 제8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7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산림부서 담당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자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산림부서 담당과장은 소각금지 위반자 명단을 농업관련 담당부서에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례 3. 법령 규정이나 근거 없는 의무에 대해 부과한 경우>

-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비치 및 등록번호 등 표시 의무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자치법규에서 이러한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OO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6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사례 4.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옥외광고물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 자치법규에서 부과한도를 초과하여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10만원 이상 <u>30만원 미만</u> 30만원 이상 <u>50만원 미만</u>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OO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6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u>30만원</u> <u>50만원</u> 100만원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를 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이의신청 등 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 규제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면 법적효력 없는 재기재에 불과하고, 다르게 규정한다면 규제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임

2. 위법한 과태료 절차 관련 자치법규 사례

<가산금을 과다하게 부과>

- (규제법) 과태료 납부에 관한 강제절차로서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자치법규 현황 및 문제점) 25건의 조례에서 과태료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 상위 법령에 반하므로 위법한 자치법규일 뿐 아니라, 조례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면 주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

< 00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7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시장은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의신청 기간을 다르게 규정>

- (규제법) 이의신청이 너무 단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6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보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자치법규 현황) 229건(조례 187, 규칙 42)의 자치법규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고,
 - 150건의 조례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음

< OO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OO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별지 제4호서식 중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문제점) 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시 6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자치법규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위법함
 - 자치법규 및 서식에 이의신청기간을 다르게 기재·통보하여 위법한 자치법규로 인해 행정 현장에 혼란이 오고,
 - 특히 30일로 규정한 경우 기간이 짧아져 불복기회를 제한할 우려

<규제법보다 조례 등을 우선하도록 규정>

- (규제법) 과태료 부과 및 집행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규제법상 내용을 다른 법령상의 내용보다 우선하도록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자치법규 현황) 987건(조례855, 규칙132)의 자치법규에서 “자치법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등을 따르거나 준용”함

< OO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55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OO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3조(과태료)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O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제7조(준용규정)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OO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9조(상위법령의 적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문제점) 자치법규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관련 사항이 규제법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도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 법체계상 혼란 및 행정현장에서 잘못된 집행을 하게 될 우려 발생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

- (규제법)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10일 이상의 기간 중에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 (자치법규 현황 및 문제점) 155건(조례 139, 규칙 16)의 자치법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하도록 하여 과태료 절차 집행상 혼란 우려

< OO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의견청취)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원 통보 기간을 불분명하게 규정>

- (규제법) 행정청은 상대방이 이의제기 시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자치법규 현황 및 문제점) 자치법규 271건(조례 233건, 규칙 38건)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 통보 기간이 불분명하게 운영되어 원활한 구제절차 진행을 방해하게 됨으로써 과태료 부과절차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

< OO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②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

<재판상 불복절차를 잘못 기재>

- (규제법) 규제법 제정 이후 규제법 제4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심판을 하고 있음
 - 제정 당시 비송사건절차법 상의 심판 절차가 미흡하여 통일성이 없어서 규제법에 과태료 심판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자치법규 현황) 49건(조례 46건, 규칙 3건)의 자치법규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불복에 대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함

< OO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

제6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② 시장은 ... 이의를 제기한 피 처분자에게도 통지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OO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별지 제4호서식 중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문제점) 자치법규 및 서식 등에서 근거법률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통보·적시하여 주민에게 잘못된 불복절차를 안내

<기타>

- 그 밖에 결손처분 관련 인용이 잘못되었거나 법체계상 하자가 있는 등의 이유로 문제가 있는 규정이 368건임

3 상위법령 위임 없이 별도의 자치법규 제정

- (현황) 위임이 없는데도 상위법이나 규제법의 내용을 “OO 과태료 조례(규칙)” 등 별도 자치법규로 정한 경우(113건)가 있음

자치법규 유형	건수	상위법령 규정
낙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규칙)	8	하천법
야영 및 취사행위 등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	
물가안정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규칙)	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규칙)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규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규칙)	6	하수도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규칙)	5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124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규칙)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
부동산 중개업(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규칙)	4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규칙)	2	건축법 제11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규칙)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규칙)	34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규칙)	20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규칙)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문제점) 과태료 금액이나 절차는 상위법령 및 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므로 별도 자치법규의 제정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게 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

Ⅲ. 개선방안

1. 정비대상

구 분			건 수
개 별 조 문	과태료 금액 관련	- 상위법령 위임 없이 법령에 반하여 금액을 규정	320
		· 법령과 다르게 금액을 규정한 자치법규	83
		·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한 자치법규	137
		· 법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규정	100
		-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위반한 자치법규	63
		·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자치법규	41
	과태료 절차 관련	- 규제법과 상충되는 절차를 규정	1,866
		· 가산금을 과다하게 부과	25
		· 이의신청 기간을 다르게 규정	379
		· 규제법보다 조례 등을 우선하도록 규정	987
		·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	155
		· 법원 통보기간을 불분명하게 규정	271
		· 재판상 불복절차를 잘못 기재	49
	기타	- 금액이나 절차 관련 오류 규정	368
별도 자치법규		- 위임 없이 별도로 자치법규 제정	113
총 계			2,730

※ 별도 자치법규의 경우 개별조문의 위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2. 정비원칙

- (개별조문)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범위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정비 대상은 삭제
- (별도 자치법규) 위임이 없는데도 상위법이나 규제법의 내용을 “OO 과태료 조례(규칙)” 등 별도 자치법규로 정한 경우 폐지
 - 자치법규 내에 신고포상금같이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거나 서식 등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규정은 유지하도록 조치

예시) “OO 폐기물 과태료 조례”에서 신고포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조례를 폐지하되 신고포상금 규정이 필요한 경우 “OO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의 “OO 폐기물 조례”로 옮겨서 규정